光州日報

제1795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월 7일 (음력 11월 29일) 월요일

김발에 붙은 타르 덩어리 6일 오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앞바다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한현구(53)씨가 김발에 달라붙은 타르 덩어리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 김 양식장 '타르' 초토화

수확철 2만1천여ha 수천억원 피해

신속 제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생긴 타르 덩어리(기름 찌꺼기)가 영광·무안·신안·진도 해역의 김 양식장 등을 덮치는 바람에 수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해역의 신속한 기름제거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6일 자원봉사자 등 6천500여명을 투입해 무안과 신안 등 해안에서 92t의 타르 덩어리를 수거하는 등 이날까지 모두 940t을 수거했다. 또 목포해양경찰과 함께 함평만에 보호 오일펜스와 그물망을 설치해 추가 유입을 막는 등 해상 방제와 예찰 활동을 계속했다. 이날까지 해남에서는 타르 수거를 완료했고 진도 해안에서도 80% 이상을 제거했다.

〈관련기사 3·7면〉

하지만, 구랍 30일부터 유입된 타르 덩어리로 인한 무안·신안·진도 해역의 수산 피해는 689건 2만1천ha에 이르는 것으로 1차 집계되는 등 이날부터 전남 서해안의 수산피해가 속속 전남도에 접수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갯바위 등 마을 관행어업 피해가 221건 1만3천여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김 등 해조류 384건 7천600ha, 굴 등 패류 72건 300ha, 어류 12건 30ha순이었다.

이 가운데 수확기를 맞은 김의 경우 이 해역에서 연간 전남 총 생산량 5천200만속(전국 생산량의 70%)의 20%인 1천200만속이 생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 차질과 함께 설을 앞두고 가격 폭등 우려도 낳고 있다.

더욱이 7~10일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사리' 물 때로 바닷물이 평소보다 육지에 5m이상 가까워져 먼바다에서 있던 타르 덩어리가 연안으로 밀려들 경우 그 피해액은 수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태안과 가장 가까운 영광의 피해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안·영광·신안해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4일 군청을 방문한 이은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전남도도 섬지역이나 갯벌·경사가 급한 갯바위 등에 상당량의 타르가 남았으나, 인력·장비 등의 부족으로 조기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조만간 행정자치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광산구·함평 일대에 조성

1천653만㎡ 규모

광주·전남의 차세대 성장 산업을 집중 배치할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단'이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원에 조성된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는 7일 건교부장관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단 타당성 용역 공동추진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오는 2월에 발주될 공동 용역안에 따르면 산단 조성지는 함평 월야면과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원〈위치도〉이며, 1천653만㎡(500만평) 규모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1조8천50억원을 투입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된다.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 후보지

산단에는 ▲자동차, 조선, 항공기 관련 첨단 부품 소재산업 ▲나노· 광산업 기반을 활용한 센서 로봇 및 영상의료기 사업 ▲생물산업 기반 신약, 의료, 제약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 집중 유치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6월께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산단조성 계획을 수립한 뒤 빠르면 2010년께 착공, 2014년께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등이 용역비 3억원을 공동투자해 추진하는 이번 타당성 용역의 공동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 광주와 전남발전 연구원 등 3개 기관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수엑스포 어쩌라고…"

해수부 폐지 검토, 여수·부산 등 반대 확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폐지가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해수부는 여수엑스포 준비 뿐 아니라 3면이 바다인 국내 여건 속에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해양 개발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인수위가 지나치게 정부 조직 축소의 실적만 중요시하는 근시안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 업무 중 건교부와 농림부에 관련된 것은 떼 준 뒤 '농림수산부'로 합치는 방안과, 해수부를 존치시키고 수산물 관련 일부 조직만 농림부에 통합해 '농식품부'로 만드는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해수부를 해체하는 전자의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6년 출범한 해수부는 그동안 해양강국을 지향하며 해양 정책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여수엑스포 유치의 주무 부서로서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1조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양심층수 사업, 부산과 광양항 배후단지와 물류단지 개발 등 한국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할 주무 부처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해부수의 해체는 이제 막 시작될 여수 엑스포 개최 준비 작업에 차질을 빚게 해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해양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통해 21세기 해양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국가적 과제를 방치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 해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지난 2일 부산 아리랑호텔에서 '해양정책제안 특별토론회'를 개최, 해수부 해체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세계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회 등 여수시 해수부 해체반대 시민모임 대표단 50여명도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를 방문,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해수부의 존치가 필연적이라고 건의했다.

여수 해수부 해체반대 시민모임은 또 지난해 말 부산지역 시민단체및 수산업계 관계자와 만나 해수부 해체저지를 위해 공동대응키로 결의하는 한편 공동으로 여수와 부산을 오가며 '해수부 해체반대 범 시민선언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상율 세계박람회여수시준비위 집행위원장은 "해수부가 해체될 경우 박람회 목표에 대한 혼선, 박람회 부지 개발에 대한 이견,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및 주변지역 개발 모델 제시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부처 13~15개로 축소"

인수위, 부총리 폐지·정무장관 부활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과 관련, 현행 18개 부(部)를 13~15개 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정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특히 부총리직을 없애는 대신 과거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정무장관직을 부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장 박재완 의원)가 오늘 이명박 당선인에게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며 "대체적인 윤곽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혁신TF는 앞서 지난 5일 현행 18개 부를 13개 또는 15개로 줄이는 복수안을 이 당선인에게 1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3개 부로 줄이는 이른바 'A안'의 경우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개편해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들과 기능 및 조직을 일부 조정하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치되 노동부와 기능을 조정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각각 통폐합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5개 부로 줄이는 'B안'은 통일부, 해양부, 여성부 등을 존치하는 대신 각 부처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이다. 특히 여성부의 경우 여성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폐지에서 존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청와대에 '대통령프로젝트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